

저탄소 도시 추구 광주시 '경차택시' 도입은 소극적

부산·대구·제주 적극 추진과 대조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가 점차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경차택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기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소형차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경차택시 도입에 미온적인 반면, 대구시, 제주도, 부산시는 경차도입 방침을 적극 추진하거나, 선보일 예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여객운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 개정해 1천600cc 미만 경차택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소형 택시요금(기본·1천900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국내 전체 택시의 97.6%가 중형(1천500cc 이상)인 점을 감안, 대중 교통을 에너지 저감형으로 바꾸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1천cc 미만 택시도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존 법인택시 업

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 홍보는 물론 경차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 검토에도 미온적이다.

시는 소비자들이 규모나 승차감 등에서 우위에 있는 중형택시를 선호하는 데다 기존 택시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경차도입을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경차택시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는 물론 도입 의사를 표명하는 업체도 전무하다.

반면, 대구시는 최근 소형택시(1천500cc)의 기본요금을 중형의 80% 선인 1천800원으로 정한데 이어 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상반기 중 배기량 1천300~1500cc의 소형택시 500대를 선보일 예정이고, 제주도는 올해 소형택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대구 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은 경차택시 도입을 시에 요청한 상태여서 경차택시 운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인택시를 경차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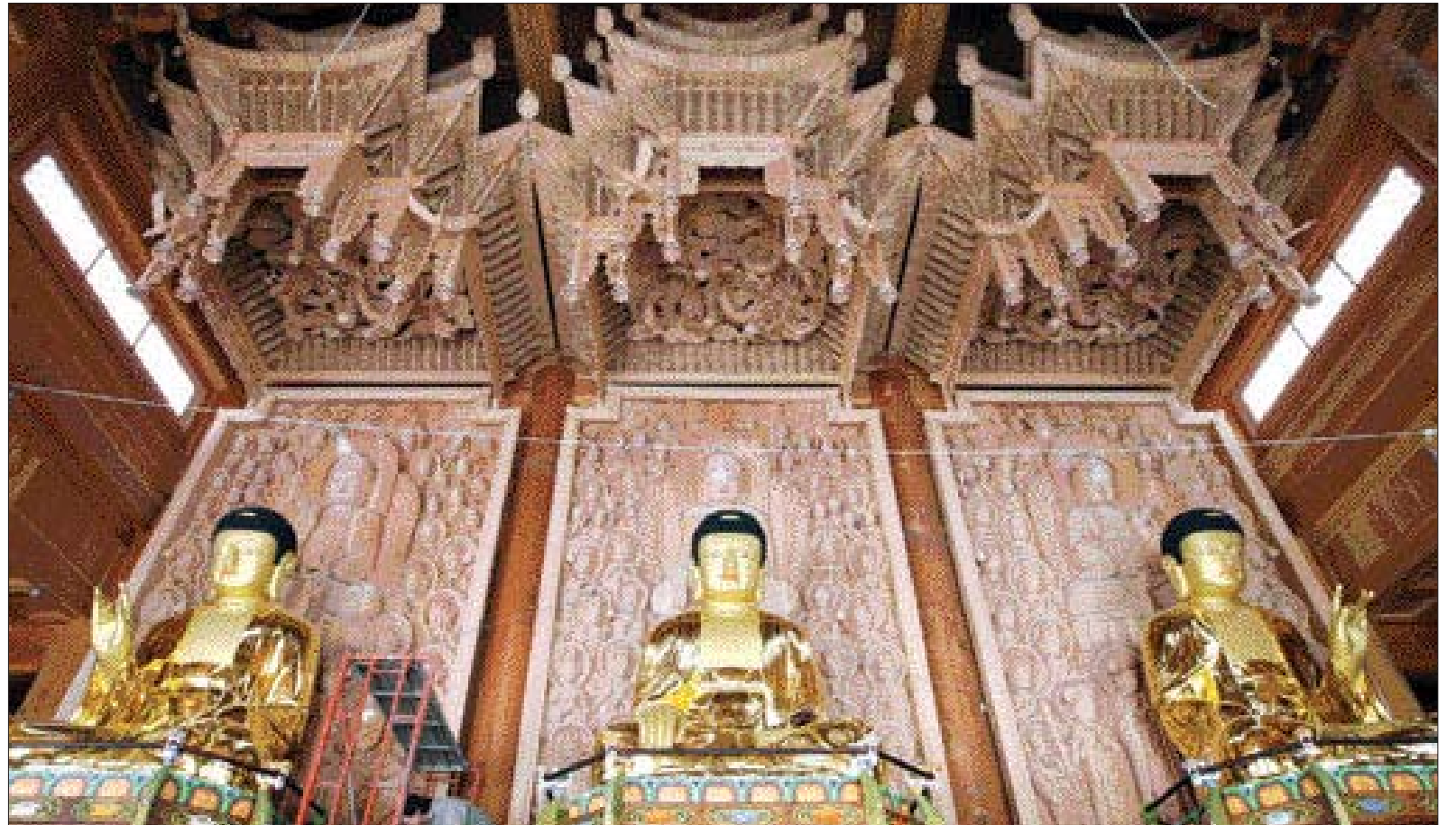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저탄소 정책에 맞춰 법인택시 업체가 경차택시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이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택시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택시(3천500대), 개인택시(4천700대) 대부분이 2천cc 이상 중형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법인·개인택시를 에너지 저소비형 경차로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택시업체와 시민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차택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천500cc미만 소형택시는 정부가 지난 1988년 택시 고급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90년대 초 차취를 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감사 대응보전 복원

'천년고찰' 영암 도감사 대응보전이 5년간의 고증을 거쳐 550여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삼존불 뒷편에 목조 후불탱화를 조성해 아름다움을 더했다. > 관련기사 13면 /영암=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대통령 "北 미사일 군사적 대응 반대"

"개성공단 유지...대화 창구 열어놓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다만)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인 만큼

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조하자는 것이기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계속될 경우 대북 경협이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군부 쿠데타 등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

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개성공단 南 직원 1명 억류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직원 1명이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

시 50분경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이 직원이 자기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억류 상태에서의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카리콜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9~20) 기간 북측의 3차례 걸친 통행 차단으로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 사업에 또 한차례 파고가 몰아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 수능 수리 다소 까다롭게 출제"

김성열 평가원장 "전체 난이도 지난해와 비슷"

올해 11월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수리 등 일부 영역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30일 2010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와 같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예년에 비해 어려웠고 특히 수리 영역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원장은 "올해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간 유·불리 차이가 없도록 난이도를 조정해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아랍어와 다른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위원들과 이 문제를 잘 논의해 '찍기'와 같은 요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는 전국 78개 시험지구별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내면 된다. /연합뉴스